

「2020-8호」

##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11. 2.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야별 목차		
분야	제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중심으로</li><li>혁신성장 전략투자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li><li>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li></ul>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 재정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li><li>2020 NABO 장기 재정전망</li><li>2021년도 예산안 분석</li></ul>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3. 예산·재정 관련법령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li><li>「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li><li>「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li></ul>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li><li>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li><li>앞으로 다가올 수소경제의 미래-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li><li>KfW(독일의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li><li>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강원도</li><li>미국의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기회구역의 시사점</li></ul>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금융연구원 국재무역통상연구원 KDB미래전략연구소 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li><li>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 도약 이룬다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li><li>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li><li>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한다</li><li>힘내라 골목경제! 올해 최고의 골목경제지원사업 선정</li><li>대한민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의 경험을 신북방에 전파한다</li><li>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li></ul>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 경제	출처
<p>■ 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 코로나19 정책대응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경제 환경) IMF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9년에 비해 7.2%p 하락한 -4.4%로 전망</li> <li>- (선진국·신흥국 경제 현황)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미국, 일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인도의 경제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남</li> <li>- (주요 경제정책 국제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요국 정책대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정·통화금융정책 조합이 실시되는 등 정부 정책대응 수준 상승, 재정준칙 등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선진국 일수록 유동성 제공 정책의 비중 상승</li> <li>② 통화정책 기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주요국들에서 화폐유통속도 감소 추세 지속, 통화승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에 비해 승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li> <li>③ 코로나19가 주요국 재정에 미친 영향: 대부분의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 경제성장률이 국제 이자부담률보다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제 실효이자율 상승 → 경제성장률 제고, 국제 차환발행 등을 통해 국제 실효이자율을 낮추려는 노력 필요</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바로가기</a></p>	국회예산정책처
<p>■ 혁신성장 전략투자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개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구체적인 성장 동력 분야로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양성, 8대 선도사업'을 추진 중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연관표의 산업 부문과 연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양성: 데이터·AI경제, 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li> <li>* 8대 선도사업: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드론</li> </ul> </li> <li>- (분석 결과)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을 산업연관표의 산업 부문과 연계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인재양성,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데이터·AI 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재정 투입 단위당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li> <li>- (시사점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른 분야별 직·간접적인 고용, 부가가치 및 생산 유발효과 비교·분석 결과는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분야별 국제경쟁력과 민간·정부의 역할 분담, 기후변화 등 환경에의 영향, 그 외 국내외 제반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li> <li>② 산업연관분석은 미시적인 산업 구조와 투자, 소비, 소득, 고용 등 거시지표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으로서, 정부 정책·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바로가기</a></p>	국회예산정책처

1. 경제	출처
<p>■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배경) 글로벌 경기는 5월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상황이 당초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임</li> <li>- (글로벌 경제상황 개관) 주요국 GDP 성장률은 2/4분기 중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급락한 가운데 미국과 유로지역이 예상보다는 양호하였으며, 3/4분기에는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상당폭 반등이 예상됨</li> <li>- (최근 경기회복의 주요 특징)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되었던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현상이 발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선진국 중심의 상품소비 회복이 글로벌 경기개선을 주도</li> <li>② 서비스 소비는 전세계적으로 부진 지속</li> <li>③ 기업투자 회복도 지연</li> <li>④ 최근 수출은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li> </ul> </li> <li>- (향후 전망) 향후 글로벌 경기는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전까지는 최근의 완전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a href="#">바로가기</a></p>	한국은행

## 2. 재정

출처

### ■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 재정소요점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장치
- (현황)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565건이며, 이 중 재정수반법률은 182건으로 분석됨



- (재정소요점검) 추가가 가능한 101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법률 16건의 시행으로 2020년~2024년까지 연평균 2조 5,207억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재정수반법률 85건 시행으로 연평균 3조 6,708억원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반영분석)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예산반영분석 결과, 16건의 수입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2020년 1,742억원 수입이 감소하였고, 66건의 지출 재정수반법률에 따라 총 3조 1,305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정수반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입법 상황에서, 이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 (장기 재정전망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현행 재정정책이 미래의 인구 및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장기 재정전망 결과)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한 것으로 전망기간 동안 정부의 재정관리 노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번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노력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결론 및 시사점) 국가채무 비율을 장기적으로 10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사회보험들은 선제적으로 재정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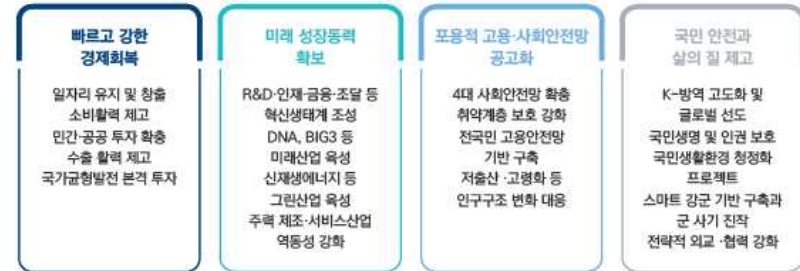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 2.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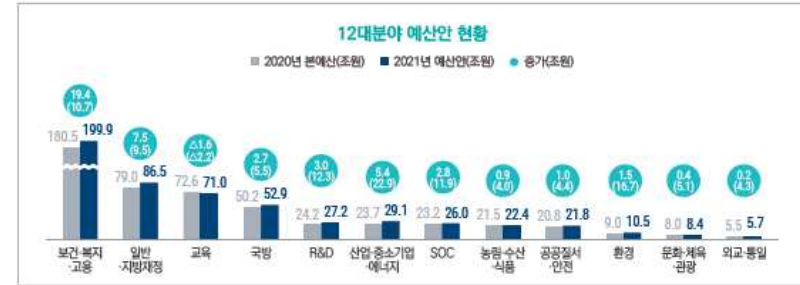
출처

### ■ 2021년도 예산안 분석

- (재정총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 실현 등을 위하여 총수입 483.0조원, 총지출 555.8조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NABO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하여 정책효과성, 재정건전성 및 재정투입의 선순환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중점 투자부분)



- (분야별 재원배분) 보건·복지·고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큰 증가



- (2021년도 예산안 주요특징 및 고려사항)

-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급격히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국가채무관리 노력 필요
- ② 조세지출 등 수입 분석: 재정수입 확보 및 재정총량 교란 방지를 위하여 조세지출 및 국유재산 특례지출의 규모 관리 필요
- ③ 한국판 뉴딜 예산안 분석: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확보 필요(예타조사),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사전준비, 사업효과 검토 등), 재정소요계획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의 실효성 검토(지방비 확보 가능성 검토, 공공부문 우선 손실부담, 세제지원 방안의 적절성·효과성 검토)
-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분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의 지속 증가 추세로 세부유형별 예산안 재원배분 검토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개선 필요
- ⑤ 8대 사회보험 운용계획안 분석: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필요,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및 추계 강화 필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기금화 필요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정 '20.10.20. 시행 '21.4.21.)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OECD 가입국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포하도록 함

[바로가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10.20.)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인 학급경비를 산정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학급경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도의 지방채 상환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측정항목으로서의 실효성이 감소한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항목 삭제
-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등에 관한 사항을 측정항목에 반영

[바로가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시행 '20.10.20.)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생경비로 통합하면서 학생경비의 단위비용을 상향하여 조정하고, 재정집행 효율화를 지원하는 측정항목의 각 측정단위별 산정공식을 마련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 (개요)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형편으로,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현황) 2019년 기준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은 총 243개 지자체 중 1개 광역, 7개 기초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5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9개 지자체가 5억원에 미달, 일부 지자체는 178억원(경기 안양시), 67억원(제주도), 54억원(경기 성남시)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자체 간 기금액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음
- (운용상 문제점) 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적립이 의무화 되었으나 일부 지자체가 따르지 않는 등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고, 관련법령의 위원회 적용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기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책임 소재 등으로 기금 운용이 소극적으로 운영됨
- (개선과제)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서) 본 보고서는 디지털화와 3저(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현상,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2030년 비전과 미래모습, 발전과제를 제시함
- (디지털화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가상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고도화 및 정교화, 시공간을 넘어선 다면적 관계, 디지털 자산의 확충, 해외시장과의 연계·개방 확대, 비금융기업의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의 복잡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3저 현상 및 코로나 위기가 금융에 미칠 영향) 3저 현상은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산업기반의 전환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산업의 역할 재설정과 경영성과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함
- (디지털화 및 3저 현상,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대응)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3저 및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적합한 신금융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향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화에 대비한 역량, 문화, 제도의 포괄적인 개선, 신 금융수요와 연계한 증가기능 및 서비스의 고도화, 개방화에 대비한 선진국형 금융기반 마련, 코로나 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계한 금융의 역할 제고, 복합금융 생태계에 대비한 규율체계 및 경영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맺음말)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은 기술, 정보, 개방에 기반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글로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재평가, 복합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안정성을 재구축하는 선순환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금융연구원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앞으로 다가올 수소경제의 미래 -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수소경제: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운반·저장하며 최종적으로 수소로 전력을 만들어 소비하는 경제를 의미(수소: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쉽게 얻을 수 있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효율이 높아 친환경성·보편성·효율성을 갖춘 에너지원)
- (연구목적 및 배경) 지구온난화가 글로벌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이에 친환경 미래에너지로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수소산업 육성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음
- (시장 동향) 2050년 수소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한화 3,000조원)의 시장과 3,000만개 이상의 누적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으로, 한국은 모빌리티와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초기 시장이 생겨나고 관련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음
- (주요국의 정책 동향)

구분	정책 동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20.2월 관련법 마련</li> <li>○ '20.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월 수소전략 발표(독일), 7월 수소로드맵 발표(EU)</li> <li>○ 2030년까지 1,400억 유로 시장으로 육성을 위해 최대 4,700억 유로 투자 계획</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4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수소연료전지 로드맵을 통해 수소사회로의 이행 선언</li> <li>○ '19년에는 先 수요지원 확대, 後 공급시스템 완성 전략 발표</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연료전지자동차 발전로드맵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수소차 보급과 수소 관련 기술 상용화 중점으로 수소전략 마련</li> </ul>

- (수소경제로의 이동 가속화) 각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의무설치비율이 상향조정되고 있어 발전 및 건물용 수소연료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시사점) 정부는 수소로드맵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균형있는 수소 생태계 육성, 산업계의 연구개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업계도 수소경제 관련 독자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임

[▶바로가기](#)

### ■ Kfw(독일의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 \*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독일정부 소유의 개발은행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황폐화된 독일 경제를 복구하고 마셜 원조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1948년에 설립된 공적 금융기관임. KfW의 가장 큰 사업체 단위의 KfW Förderbank (KfW의 관측 은행)은 독일의 주거문제와 환경보호문제를 위해 자금을 지원함
- Kfw는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주요 분야로 기후변화·환경 분야를 설정하고 금융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2019년에는 전체 신규 약정액(지원액) 773억 유로 가운데 기후변화·환경분야에 297억 유로(38.4%)를 지원함
- 또한, Kfw는 2019년부터 신규사업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맵핑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유럽 정책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TCFD 권고안을 지지하는 등 기후금융 선도를 위한 자체적인 변화도 시도 중임

[▶바로가기](#)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이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강원도

- (육성 배경) 지역 전략산업의 한계, 주력 제조업의 위기, GRDP 정체가 지속되면서, 강원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적합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이모빌리티가 선정됨
- (최근 동향 및 정책) 이모빌리티 산업은 퍼스널 모빌리티나 전기차의 생산에 머물지 않고 자율주행차, 미래형 항공모빌리티, 다양한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등으로 계속 진화 중임
- (강원도의 성과) 그간의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도의 성과는 전기차 임대 공장 및 주행시험로 건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국책사업 유치, 강원도 독자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 이모빌리티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 등임
- (강원도의 육성방향) 국내를 선도하는 대표 전기차 생산, 특화된 서비스 생태계 구축,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젊은 인력의 유출 방지 등임
- (미래 추진전략) 경형화물전기차를 강원도 주력 전기차로 육성하면서 클래식 전기차, 농촌형 자율셔틀, 관광형 항공모빌리티 등 강원도가 특화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미래 모빌리티 생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5G/6G테스트 센터 구축, 농촌형 자율주행셔틀 개발 및 실증사업, 모빌리티-관광 연계형 통합 이동서비스, 관광형 항공교통 실증거점과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함

[▶바로가기](#)

### ■ 미국의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기회구역의 시사점

- (다각적인 접근) 총량적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양적성장의 반동으로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과 낙후지역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대응책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도입된 낙후지역 민간투자 촉진정책인 기회구역제도(Opportunity Zone)는 국내 정책 개선을 위해 참고할 가치가 있음
- (미국의 기회구역제도) 기회구역제도는 민간투자자들이 이전 투자를 통해 얻은 자본이득을 기회구역에 투자할 경우, 이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유예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제도로 2017년 제정된 '감세와 일자리 법안'에 의거 시행됨 → (도입효과) 투자금 유입의 장벽을 낮추고 창의적인 투자사업 발굴 도모, 기회구역펀드와 같은 투자기구 도입, 투자 기간에 따른 순차적인 세제혜택 확대
- (기회구역 지정현황 및 성과) 제도시행 이후 미국 전역에 지정된 기회구역은 8,764개소이며, 총 8701억 달러 가량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구역펀드는 지역소상공업체, 주택사업, 도시재생, 농촌재생, 커뮤니티 혁신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투자됨
- (시사점) 강원도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과 같은 저개발지역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특히 높음 지역이므로 기회구역제도와 같은 민간투자 인센티브가 강한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이 절박함 → 기회구역제도는 국세를 투자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만큼 강원도의 역량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므로, 강원도와 유사한 타 시도와의 공론화, 이슈화, 연구 차원의 연계가 필요함

[▶바로가기](#)

국제무역통상  
연구원

강원연구원

KDB미래전략  
연구소

강원연구원

## 5. 뉴스브리핑

출처

### ■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7.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함
-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9% 성장률을 나타내며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세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으나, 경기반등을 넘어 경제도약을 이루기 위한 혁신은 불가피함
- 이에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으로 ①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②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③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대한 안건이 논의됨

[바로가기](#)

### ■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 도약 이룬다 - 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정부는 10.15.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함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안건번호	구분	안건명
1호	심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2호	심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3호	보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4호	보고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5호	보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 (주요 내용)
  - 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 목표,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 기대
    - \*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 부과(수소법 개정)
  - ②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 기대
  - ③ 정유·가스社,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 동참(Kohygen 설립\* 추진)
    - \*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MOU 체결식
  - ④ 4개 지자체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이를 뒷받침할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
    - \*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 ⑤ 내년 수소관련 예산 대폭 확대(7,977억원, 약 35% ↑, 정부안·국비 기준):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기반 마련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 5. 뉴스브리핑

출처

### ■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9.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 특히, 논의된 10개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으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제4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안건번호	구분	안건명	비고
1호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현대글로비스)	그린 뉴딜 (5건)
2호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현대차)	
3호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굿바이카)	
4호	실증특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현대로템)	디지털 뉴딜 (3건)
5호	실증특례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창원산업진흥원)	
6호	실증특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한국전력)	디지털 뉴딜 (3건)
7호	실증특례	스마트 주차로봇(마로로봇테크)	
8호	실증특례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9호	실증특례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메코비)	
10호	임시허가	플랫타임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LS전선)	

[바로가기](#)

###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제사회 그린뉴딜 공조 강화한다

- 환경부는 10.20. 정부세종청사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및 그린뉴딜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을 ① 재정투입, ② 민간투자(펀드·금융), ③ 법·제도 개선, ④ 지역 확산의 4개 축으로 추진 중인 현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및 2050년 탄소중립 등 유럽기후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공유함

[바로가기](#)

### ■ 힘내라 골목경제! 올해 최고의 골목경제지원사업 선정

- 행정안전부는 10.29.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함
-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발표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이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경상북도 문경시의 「접촌 문화의 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다시 뛰자!」, 충청북도 청주시의 「골목상권 간 연계 융성화 사업, 기억을 머금은 윤리단길↔역사·예술의 숨길 성안길」 등이 선정됨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 5. 뉴스브리핑

출처

### ■ 대한민국,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의 경험을 신북방에 전파한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10.22. 유엔개발계획(UNDP)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평가\*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한다고 밝혔
- \* OECD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디지털평가에서 총 33개국 중 종합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 이 협력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와 UNDP가 총 110만 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연구 수행, 연수과정 운영, 협력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4차 추경)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는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국제적으로 증명 받은 것으로 평가됨

[바로가기](#)

###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행정안전부

- 정부는 10.13.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논의함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중앙-지방간 협력이 절실함
- \*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160조원) 중 실질적인 지역사업 규모는 75.3조원 수준(약 47%)
- 지역균형 뉴딜 유형은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으로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구분	주요내용
뉴딜 지역사업	○ 뉴딜 공모사업시 균형발전 고려 ○ 지역 관련 특구(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의 뉴딜지원 ○ 지역 주력사업의 뉴딜 연계
지자체 주도형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교부세 지원 - 균특회계 인센티브 차등지원, 지역산업활력펀드 활용 등
공공기관 선도형	○ 공공기관 선도사업 발굴 ○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 거점으로 발전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보강 -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및 시도 뉴딜 추진단 구성

[바로가기](#)